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강 동 우**

I. 문제 제기

최근 지속되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은 노동 공급자인 청년층이 바라는 일자리와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제안하는 일자리의 차이, 즉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청년층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전 세대보다 더욱 중시하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당장의 취업보다는 직업 탐색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중에 청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미스매치에 대한 청년층의 대응은 직업 탐색을 지속하거나, 첫 직장에서의 근속보다는 다음 직장으로 이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지역이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이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주성향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통계청, 2017),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이동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응하는 청년층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지만, 공간적으로 수도권은 청년층이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청년인구가 감소하여 청년구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리적으로도 표출되는 점은 청년문제가 지역의 문제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인적자본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핵심요소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지역이동의

* 이 글은 윤윤규 외(2017), 『청년 고용·노동시장의 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의 제5장을 발췌·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dwkwang1982@kli.re.kr).

특징을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어떠한 지역 특성들이 청년층 지역이동에 주요한 요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분석모형과 자료를 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가 제시되며, 제Ⅴ장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지역이동의 주요 특징

(1) 청년층의 일상적 노동시장 범위는 수도권 및 광역시도 경계를 넘지 않는다.

제Ⅱ장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규용 외(2015: 43~85)는 청년층을 15~34세로 정의하고,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상·하반기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층의 ‘역내 통근율(=역내 통근자 수:역내 취업자 수)’을 계산하였다.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자치시군구(광역시 제외), 자치시군구(광역시 포함), 16개 광역시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을 때, 역내 통근율은 각각 68.4%, 77.8%, 86.1%, 99.2%로 나타났다. 그러나 16개 광역시도별 역내 통근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기준에 상관없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의 역내 통근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이규용 외(2016: 35~66)의 연구 역시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20~34세를 청년층으로 정의한 이 연구는 통계청의 2000년 및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 샘플을 이용하여 16개 광역시도 수준에서 대구와 경북의 근무지 기준 역내 통근율을 계산하였다. 대구의 경우 2000년 역내 통근율이 94.8%, 2010년에 94.4%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각각 91.6%, 89.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우리나라 청년층의 일상적인 노동시장의 공간적 범위는 대체로 광역시도 경계를 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울, 인천, 경기도로 구성되는 수도권에서는 청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지역 간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며 단일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층의 광역시도 지역 간 인구이동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5~29세 연령층의 이동성이 강화되었다.

이규용 외(2015: 43~85)는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15~34세 청년층의 광역시도 지역 간 이동 비중을 분석하였는데, 2000년 34%였던 청년층의 이동 비중이 2010년에는 36.6%, 2014년에는 37.6%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에 전체 인구의 광역시도 지역 간 이동비중

이 31.6%→32.4%→32.9%로 상대적으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2000년 이후 청년층의 이동성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연령대별 이동비중을 살펴보면 2000년에 15~19세 24.9%, 20~24세 37.9%, 25~29세 36.8%, 30~34세 32.2%였으나, 2014년에는 각각 29.5%, 42.3%, 42.0%, 34.7%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20~24세 연령층의 이동률이 25~29세 연령층보다 1.1%p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차이가 0.3%p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25~29세 연령층의 이동성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 후반에서 이동성이 강화된 것은 대학 진학률의 증가, 노동시장 진입 연령대의 지연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규용 외, 2015: 57).

(3)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은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다.

김준영(2016)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16개 광역시도 수준에서 청년층 이동성을 분석하였다. 1986~1990년에 태어난 연령집단이 5~9세였던 1995년의 광역시도별 인구규모를 100으로 지수화하였을 때, 이 연령집단이 20~24세인 2010년, 25~29세인 2015년의 인구규모를 비교하여 광역시도별 청년층 인구의 순유입을 살펴보았다. 1995년 전국 인구규모가 100일 때 2010년에는 99.2, 2015년에는 99.4로 1986~1990년생 연령층의 전국 인구규모가 자연감소에 의해 다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에 전국 인구규모 지수(99.2)보다 높은 인구규모 지수를 보인 지역은 서울(102.5), 광주(102.8), 대전(105.2), 경기(111.2), 충남(104.8)으로, 이들 지역으로 청년층 인구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에 전국 인구규모 지수(99.4)보다 높은 지수를 보인 지역은 서울(114.5), 인천(99.8), 대전(101.4), 경기(119.7), 충남(100.4)으로 수도권과 대전, 충남지역에 청년층의 유입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1986~1990년생이 20대 청년층 시기에 수도권과 광주, 대전, 충남으로의 이동성이 강하며, 특히 20대 후반에 수도권 지향성이 두드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자료를 분석한 문남철(2010)은 대졸자의 40%가 수도권에서, 60%가 비수도권에서 졸업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대졸자의 취업지는 수도권이 53.7%, 비수도권이 46.3%로 나타나 취업을 위해서 대졸자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4)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은 대학 진학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김준영(2016)의 연구는 1986~1990년에 태어난 연령집단이 10~19세 시기까지는 광역시도별 인구규모의 변화가 크지 않다가 대학진학 연령대인 20~24세 시기에 지역별 인

구규모의 감소와 증가가 뚜렷하게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시기인 25~29세 시기에 광역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청년층 인구규모의 급속한 감소와 함께 수도권 청년층의 인구규모 증가를 발견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청년층의 광역시도 지역 간 인구이동이 대학 진학과 대학 졸업 후 취업 시기에 주로 발생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평균수능점수 분포의 변화를 분석한 이상호(2012)의 연구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2009GOMS1)와 대학 및 학과별 수능점수를 결합한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소재지를 서울, 경기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평균 수능점수를 살펴보았다. 0.00~1.00점으로 환산된 평균 수능점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서울 0.64, 경기권 0.59, 비수도권 0.57로 지역 간 편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 소재지별로 분석하였을 때는 서울 0.80, 경기권 0.53, 비수도권 0.52로 나타나 평균 수능점수의 서울과 비서울 지역 간 편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첫 직장 소재지 기준으로 평균 수능점수를 살펴보면, 서울 0.63, 경기권 0.58, 비수도권 0.55로 다시 지역 간 편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비수도권 출신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비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취업하는 경향은 낮은 반면, 수도권 출신이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취업하는 경향이 강하다.

심재현·김의준(2012)은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 대졸업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8GOMS)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고등학교 소재지, 대학교 소재지, 현재 직장 소재지에 따라 대졸자의 지역 간 이동 유형을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취업한 비율은 82.93%이며 비수도권에 잔류한 비율은 17.07%로 나타나 수도권 출신은 수도권으로의 회귀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비수도권으로 회귀하여 취업한 비율은 19.81%이고, 수도권에 잔류한 비율은 80.19%로 나타나 비수도권 출신의 회귀성향은 수도권 출신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에 청년층과 함께 40대 이상 연령층을 포함하였지만 권오규·마강래(2012) 역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11차 조사자료(2008년)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14세 무렵의 성장지역, 대학 소재지, 현재 직장 소재지 조합에 따른 유형별 분포를 분석하였다. 수도권에서 성장하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현재 직장이 수도권인 비율이 86.1%이며 비수도권인 비율은 14.0%로 나타나 수도권 출신의 회귀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성장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 현재 직장이 수도권인 비율이 75.8%, 비수도권인 비율이 24.2%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회귀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 (6) 고졸 취업자의 고교 소재지 잔류율이 대졸 취업자의 대학 소재지 잔류율보다 높다.
또한 고교 소재지와 대학 소재지가 같을 경우, 전문대졸 취업자가 4년제 대졸 취업자보다 잔류율이 높다.

정윤선·지민웅(2012)은 청년층의 취업에 따른 지역 간 이동 특징을 대졸자와 고졸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졸자의 대학 소재지 잔류율 분석의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9GOMS)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잔류율은 91.5%였으나, 충청권 42.3%, 호남권 65.6%, 대경권 59.2%, 동남권 77.5%, 강원권 39.2%, 제주권 74.3% 등 비수도권 지역의 잔류율은 40~7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 2월 고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고졸자취업진로조사(2011HSGOMS)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수도권 소재 고졸 취업자의 지역 잔류율은 92.6%였으며, 충청권 88.3%, 호남권 61.5%, 대경권 86.2%, 동남권 78.9%, 강원권 44.7%, 제주권 70.2%로 나타났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제외한 고졸 취업자의 고교 소재지 잔류율은 70% 이상으로 나타나 대졸 취업자의 경우보다 높은 지역 잔류율을 보였다. 호남권의 경우 고졸자 지역 잔류율이 대졸자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호남권에 고졸자가 취업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윤선·지민웅, 2012: 36). 앞서 살펴본 심재현·김의준(2012)의 연구는 고교 소재지와 대학 소재지가 같을 경우, 4년제 대졸 취업자보다 전문대졸 취업자의 잔류율이 높음을 보이고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8GOMS)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수도권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4년제 취업자의 67.2%가 수도권에 잔류한 반면, 전문대 졸업자는 83.0%가 잔류하였다. 비수도권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4년제 취업자는 60.4%가 비수도권에 잔류하였지만, 전문대졸 취업자는 79.7%가 잔류하였다.

- (7)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 산업구조는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성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09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9GOMS)와 2011년 고졸자취업진로조사(2011HSGOMS)를 분석한 정윤선·지민웅(2012)의 연구는 대졸자의 대학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 고교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충청권과 강원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51.0%, 56.4%로 나타난 반면, 호남권은 25.0%, 대경권 22.4%, 동남권 15.1%, 제주권 19.9%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충청과 강원, 이

중에서도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에서 대졸자의 수도권 유출성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졸자의 고교 소재지와 직장 소재지의 분석에서는 충청권의 수도권 유출률이 8.4%로 대졸자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경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4.7%이지만 지리적으로 근접한 충청권으로의 유출률은 8.0%로 더 높게 나타났다. 동남권의 경우에도 수도권 유출률은 4.7%이지만 대경권으로 8.5%, 충청권으로 7.2%가 이동하였다. 반면 지역 산업기반이 취약한 호남권과 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18.0%, 3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류장수(2015)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의 4년제 대학 졸업자 표본을 이용하여 고교에서 대학, 대학에서 현재 직장으로의 이행에서 지역 간 이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고교에서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의 경우, 수도권 고교 졸업자의 29.3%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였는데, 이 중 약 66%가 충청권 대학으로 진학하였고, 약 17%가 강원권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후 직장으로의 이행에서 충청권과 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각각 53.7% 및 56.2%로 나타났으며, 호남권 25.4%, 대구경북권 24.1%, 부울경권 18.8%, 제주권 23.6%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4년제 대학 졸업생의 8.3%만이 비수도권에 취업하였는데, 이 중 약 40%는 충청권에 취업하였고, 약 24%는 부울경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서 지리적 근접성과 지역산업 구조가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8) 비수도권 고교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향은, 남성이며, 외고 및 과학고를 졸업하고,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강하다.

류장수(2015)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의 4년제 대학 졸업자 표본을 이용하여 고교 졸업 후 수도권 대학 진학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 진학 경향이 강하며, 외고 및 과학고 졸업생이 다른 유형의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대졸 이상이고 대입 당시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수도권 대학 진학 확률이 높았다. 특히 부모소득의 경우, 월 소득 300만~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비해 약 1.4배의 오즈비(odds ratio)¹⁾를 보였으나,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비해 약 2.2배의 오즈비를 보여 부모가 고소득인 경우에 수도권 대학 진학 확률이 월등히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류장수 외(2013)는 201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0GOMS) 자료를 이용하여 부산지역 고졸자를 중심으로 대학진학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산지역 고졸자의 경우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수도권 대학 진학

1) 오즈비(odds ratio)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몇 배 더 큰지를 의미한다(이성우 외, 2005: 64~68).

비율이 높았으며, 외교와 과학고 졸업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 비율이 타 지역으로 진학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경우에 울산에 이어서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울산 소재 대학보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9)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며, 의약 및 예체능계열인 경우에 다른 전공계열보다 수도권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격증이 많고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

류장수(2015)는 201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1GOMS) 자료의 4년제 대학 졸업자 표본을 이용하여 비수도권 4년제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수도권 취업 성향이 강하며, 사회, 인문, 교육, 공학, 자연계열에 비해서 의약 및 예체능 전공계열이 수도권에 취업할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수도권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수도권에 잔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재현·김의준(2012)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소재지의 수도권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수도권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유형에 따라서 류장수(2015)와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 ‘수도권 고교 졸업-비수도권 대학 졸업’ 유형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비수도권 고교 졸업-비수도권 대학 졸업’ 유형의 경우에는 교육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에서 수도권 취업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의약과 예체능계열의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의 취업지원과 수업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수도권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0) 졸업 후 지역 간 이동은 임금수준에 단기적으로 정(+)의 효과를 가지며, 대학 소재지는 임금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김경년 외(2005)는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전문계고 2005년 졸업생 중 임금근로자 표본을 추출하여 첫 번째 일자리의 임금에 지역 간 인구이동이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광역시도 기준으로 고교 소재지에 취업한 경우와 이외 지역에 취업한 경우로 구분하여 지역 간 이동의 영향을 구조방정식과 성향점수매칭법으로 추정하였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건강, 성, 계열, 취업경험, 자격증, 직업훈련을 통제한 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한 지역 간

이동의 총 효과는 10.9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지역 간 이동이 기술수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임금에 끼친 영향은 0.83만 원이며, 지역 간 이동의 직접적 영향은 10.13만 원으로 추정되어 기술수준을 통한 매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향점수매칭법으로 분석한 지역이동의 임금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지역 간 이동을 시행한 집단에 대한 지역이동의 임금효과)는 10.10만 원으로 추정되어 구조방정식 추정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규용 외(2015: 43~85)는 2010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0GOMS)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졸업 후 1.5~2년이 경과된 시점의 임금수준에 대한 지역 간 이동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대학 소재지와 임금수준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출신대학이 서울 소재인 경우에 대비해서 인천 및 경기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11.5%, 충청권 대학은 -15.4%, 영남권 -14.4%, 호남권 -18.3% 월 평균 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유사한 결과가 김희삼(2010)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2005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5GOMS) 자료를 이용한 4년제 대졸자의 임금함수 추정에서 개인 및 출신대학의 주요 특성을 통제하였을 때, 출신대학이 서울인 경우에 비해서 비서울지역 대학 출신의 월 평균 임금수준이 약 16%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졸업학과의 평균 수능점수를 함께 통제하였을 때는 비서울지역 대학 출신의 임금이 약 5%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입학 당시의 수능성적 차이가 대학 소재지에 따른 임금 차이의 약 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지역 청년층 증가율의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모형과 자료

제Ⅲ장에서는 어떠한 지역 특성들이 청년층 지역이동에 주요한 결정요인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과 자료를 설명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설정한 횡단면 선형회귀모형은 식 (1)과 같으며, 식의 좌변에 정의된 종속변인은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 인구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별 2014~2015년 증가율을 나타낸다. 실증분석에서는 청년층의 학력을 고졸 이하, 2·3년제 대졸, 4년제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학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청년층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점, 취업시기가 늦어지면서 30대 신입직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강동우, 2016: 6) 청년층 연령대를 20~34세로 정의하였다. 종속변인을 구축하기 위한 자료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샘플을 이용하였다.²⁾

2) 국내 선행연구들은 주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고졸자 취업진로 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자료를 청년층 연구에 사용하였으나, 청년층의 학력별 이동현황을 구분할 수 있고, 방대한 표본 수가 가능하며, 비

식의 우변에는 지역이동과 관련 있는 지역특성 변인들을 지역별 청년층 증가율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포함하였으며,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2014년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우선 지역노동 시장 특성으로 지역별, 학력별 청년층 기대임금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대임금은 시군구 지역별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의 학력별 평균 임금(근무지 기준, 2010년 고정가격)과 지역 고용률(거주지 기준)의 곱으로 정의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역별, 학력별 기대임금을 계산 하기 위해서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 상·하반기’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상·하반기 학력별 기대임금을 각각 계산한 후, 상·하반기의 평균값을 기대임금으로 사용하였다. 기대임금과 함께 지역노동시장의 산업구조가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동일한 자료에서 각 학력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의 상·하반기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begin{aligned}
 (20 \sim 34\text{세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율}_{2015,i}) = & \quad (1) \\
 & \beta_0 + \beta_1(\text{기대임금}_{2014,i}) + \beta_2(\text{제조업 종사자 비중}_{2014,i}) \\
 & + \beta_3(\text{인구밀도}_{2014,i}) + \beta_4(\text{공시지가}_{2014,i}) + \beta_5(\text{문화기반시설}_{2014,i}) \\
 & + \beta_6(\text{인구증가율}_{2014,i}) + \beta_7(\text{수도권 더미}_i) + \beta_8(\text{지방5대도시 더미}_i) \\
 & + \beta_9(\text{혁신도시 더미}_i) + \beta_{10}(\text{인접지역 혁신도시 유무 더미}_i) + \epsilon_i
 \end{aligned}$$

지역노동시장의 특성과 함께 해당 지역의 집적경제 수준 역시 청년층의 유입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국지적으로 산업이 집적하게 되면 산업 내 및 산업 간 지식확산과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고, 노동풀(labor pool)이 커지면서 높은 임금수준과 다양한 고용기회가 근로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McCann, 2013: 49~72; O’Sullivan, 2015: 60~95). 집적의 경제는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KOSIS 자료를 이용하여 시군구 면적 대비 2014년 주민등록인구로 계산된 인구밀도를 지역별 집적경제를 측정하는 대리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서 전입지역의 높은 물가수준은 실질소득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지역의 높은 주거비용은 자산 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2014년 시군구별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의 도시주거지역 공시지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을 주거비용의 대리변인으로 포함하였다.

지역 간 이동에서 임금수준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역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교적 최근의 청년층 지역 간 이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청년층은 2015년 현재 만 20~34세이며, 경제활동상태가 ‘주로 일하였음’, ‘틈틈히 일하였음’, ‘일시휴직’이고, 임금 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시군구별 청년층 증가율은 2015년 거주지와 2014년 거주지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증가율 계산을 위한 기간을 2014~2015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분석대상 청년층의 학력변동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있고, 특히 소비도시이론은 고학력 계층일수록 삶의 질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다양한 식당, 극장 등 도시 어메니티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한다(Glaeser et al., 2001; Glaeser and Gottlieb, 2006). 이처럼 지역 어메니티 요소가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서도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통계청 KOSIS의 2014년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를 설명변인에 포함하였다.

앞서 설명한 설명변인들과 함께 몇 가지 통제변인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청년층 증가율에서 지역 인구증가율 추세를 통제하고자 통계청 KOSIS의 주민등록인구 기준 2013~2014년 인구증가율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더미 변인 및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더미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입지와 청년층 증가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포함한 혁신도시 더미 변인을 추가하였다.³⁾ 또한 혁신도시 입지에 따라서 주변지역의 청년층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확산효과(spatial spillovers)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접지역의 혁신도시 유무로 정의되는 더미변인을 추가하였다.⁴⁾

IV. 분석결과

<표 1>은 전술한 식 (1)의 학력별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형 1은 고졸 이하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의 증가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서 기대임금은 5% 유의수준에서 지역 청년인구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보였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중 역시 청년층 증가율에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집적경제의 대리변인인 인구밀도와 주거비용의 대리변인인 공시지가 변인은 각각 부(-)의 효과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문화기반시설은 5% 유의수준에서 고졸 이하 청년층의 증가율에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이 늘어날수록 고졸 이하 청년층이

- 3) 혁신도시가 입주한 15개 시군구는 다음과 같다(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 2017): 1) 부산 영도구(동삼혁신지구), 2) 부산 남구(문현금융단지, 대연혁신지구), 3) 부산 해운대구(센텀시티), 4) 대구 동구(대구신서혁신도시), 5) 전남 나주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6) 울산 중구(울산우정혁신도시), 7)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8) 강원 원주시(강원원주혁신도시), 9) 충북 진천군(충북혁신도시), 10) 충북 음성군(충북혁신도시), 11) 전북 전주시(전북혁신도시), 12) 전북 완주군(전북혁신도시), 13) 경북 김천시(경북드림밸리), 14) 경남 진주시(경남진주혁신도시), 15) 제주 서귀포시(제주서귀포혁신도시).
- 4) 인접지역 혁신도시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인은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의 2015년 센서스용 행정구역(시군구) shapefile과 GeoDa(GeoDa Center, 2017)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Queen weight matrix(시군구 행정구역 경계 사이에 면 또는 모서리가 맞닿아 있는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정의됨, precision=1 적용)로 정의하였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되기보다는, 문화기반시설이 적은 지역에 고졸 이하 청년층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분포가 더 집중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추측된다. 인구증가율의 추정치는 1%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보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고졸 이하 청년층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지방 5대 광역시, 혁신도시 더미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추정결과

| | 모형 1 (종속변인 :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율(%), 고졸 이하) | | 모형 2 (종속변인 :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율(%), 2·3년제 대졸) | | 모형 3 (종속변인 :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 증가율(%), 4년제 대졸 이상) | |
|------------------------------------|--|---------------|---|---------------|--|---------------|
| | 추정치 | (Robust S.E.) | 추정치 | (Robust S.E.) | 추정치 | (Robust S.E.) |
| 해당 학력 기대임금 (만 원/월) | 0.043 | (0.019)** | 0.066 | (0.031)** | 0.121 | (0.030)*** |
| 해당 학력 제조업 종사자 비중(%) | 0.045 | (0.018)** | -0.003 | (0.022) | -0.039 | (0.034) |
| 인구밀도 (천 명/km ²) | -0.044 | (0.057) | 0.053 | (0.053) | -0.012 | (0.085) |
| 공시지가 평균 (백 만 원/m ²) | -0.079 | (0.164) | 0.045 | (0.180) | -0.738 | (0.186)*** |
| 문화기반시설 (개/10만 명) | -0.097 | (0.045)** | 0.012 | (0.069) | 0.124 | (0.067)* |
| 인구증가율(%) | 0.630 | (0.120)*** | 0.912 | (0.166)*** | 1.612 | (0.362)*** |
| 수도권(더미변인) | 0.932 | (1.198) | -1.566 | (1.085) | -2.093 | (1.381) |
| 지방 5대 광역시(더미변인) | -0.377 | (0.708) | -2.058 | (0.762)*** | -3.430 | (1.116)*** |
| 혁신도시(더미변인) | 0.098 | (0.683) | 2.037 | (0.814)** | 4.915 | (2.358)** |
| 인접지역에 혁신도시 유무(더미변인) | 0.581 | (0.604) | 0.824 | (0.615) | -1.073 | (0.947) |
| 상수항 | -4.292 | (1.274)*** | -8.591 | (3.878)** | -14.690 | (4.499)*** |
| 관측치 | 229 | | 229 | | 229 | |
| Adjusted R ² | 0.271 | | 0.262 | | 0.481 | |
| mean VIF | 1.780 | | 1.720 | | 1.760 | |
| max VIF | 2.830 | | 2.770 | | 2.830 | |

주 : * P-value < 10%, ** P-value < 5%, *** P-value < 1%.

모형 2는 2·3년제 대졸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의 증가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기대임금은 2·3년제 대졸 청년층 증가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대임금이 월 1만 원 증가할 때 지역 청년층 증가율이 0.066%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졸 이하 청년층의 경우(0.043%p)보다 더 큰 한계효과를 보였다. 반면 2·3년제 대졸 청년층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청년층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또한 인구밀도, 공시지가 평균, 문화기반시설도 2·3년제 대졸 청년층의 증가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구증가율은 정(+)의 효과를 보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2·3년제 대졸 청년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도권 지역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방 5대 광역시 지역더미는 1%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를 보여 2·3년제 대졸 청년층이 지방 광역시를 이탈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도시 지역 더미의 추정치는 5% 유의수준에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 입지가 2·3년제 대졸 청년층의 유입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접지역에 혁신도시가 입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모형 3은 4년제 대졸 이상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의 증가율을 종속변인으로 한 추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4년제 대졸 이상의 경우에도 기대임금은 청년층 증가에 정(+)의 효과를 보였으며, 기대임금 월 1만 원 증가에 대해 0.121%p 청년층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고졸 이하(0.043%p) 및 2·3년제 대졸(0.066%p)의 경우보다 더 큰 한계효과를 보였다. 2·3년제 대졸의 경우와 유사하게 제조업 종사자 비중과 인구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시지가는 1% 유의수준에서 부(-)의 효과를 보여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에서 청년층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지만 문화기반시설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증가에 정(+)의 효과를 보여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유입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구증가율은 모형 1과 2의 결과와 같이 정(+)의 효과를 보여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 더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방 5대 광역시 지역더미는 1% 유의수준에서 -3.430%p의 부(-)의 효과를 보여 지방 광역시를 이탈하는 경향이 2·3년제 대졸 청년층의 경우(-2.058%p)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지역 더미의 추정치는 5% 유의수준에서 4.915%p의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도시 입지가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유입에 긍정적이며, 그 효과가 2·3년제 대졸 청년층의 경우(2.037%p)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지역에 혁신도시가 입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모형 2의 결과와 유사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V.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확인한 10가지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을 정리하였고, 2014~2015년 기간 동안 20~34세 임금근로 청년층의 시군구 지역별 증가율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지역특성이 청년층의 지역이동에 주요한 요인인지를 학력수준별로 살펴 보았다.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노동시장의 높은 기대임금은 지역 청년층 증가에 긍정적이며, 그 효과는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크게 나타났다. 둘째, 지역노동시장에서 제조업 비중은 고졸 이하 청년층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 주거비용과 문화시설의 영향은 특히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넷째, 지방 5대 광역시에서의 청년층 유출은 2·3년제 대졸 이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특히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의 유출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다섯째, 혁신도시는 2·3년제 대졸 및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이 해당 지역에 유입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인접지역의 청년층 증감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는 미미하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들은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지역으로 청년층이 유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기대임금이며, 특히 ‘두뇌유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방 광역대도시에서는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의 청년층이 주거비용과 문화시설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고학력 청년층의 주거문제와 지역 어메니티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청년층에 대한 혁신도시의 영향은 해당 지역에 대졸 이상 계층의 유입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혁신도시의 인접한 지역에 대한 공간적 파급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혁신도시 지역에 유입된 고학력 인적자본을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지역정책적 노력 역시 강구되어야 하겠다. [KLI]

[참고문헌]

- 강동우(2016), 『지역일자리 지표 DB 개발 및 구축방안 연구 - 청년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홈페이지(2017. 11. 15 접속), <http://innocity.molit.go.kr/index.jsp>

- 권오규·마강래(2012), 「대학진학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역연구』 28(4), pp.65~77.
- 김경년·이난영·김형기(2005), 「전문계고 졸업생의 지역이동 실태와 결과」,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논문집』 제5회, pp.183~202.
- 김준영(2016), 「청년인구의 지방유출과 수도권집중: 5가지 특징」,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가을호, 한국고용정보원, pp.6~24.
- 김희삼(2010), 「지방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별 교육격차」, 『한국개발연구』 32(2), pp.56~93.
- 류장수(2015), 「지역 인재의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23(1), pp.1~23.
- 류장수·박성익·조장식(2013), 「부산지역 청년층 인재유출입 분석」, 『노동리뷰』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20~29.
- 문남철(2010), 「대학 졸업자의 지역간 취업이동과 지역발전」, 『국토지리학회지』 44(4), pp.581~593.
- 심재현·김의준(2012), 「대학졸업자의 지역 간 취업이동 요인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취업이동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75, pp.37~51.
- 이규용·강동우·고영우·전인(2016), 『청년층 지역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고영우·김우영·오민홍·이상호·홍성효(2015), 『지역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노동시장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2012), 「공간적 요인이 청년 대졸자의 하향취업에 미치는 효과」, 『공간과 사회』 40, pp.38~77.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2005), 『로짓·프로빗모형 응용』, 박영사.
- 정운선·지민웅(2012), 『신규산업인력 이동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 통계청(2017), 「보도자료: 2016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GeoDa Center 홈페이지(2017. 11. 17 접속), <http://geodacenter.github.io/>
- Glaeser, E. L. and J. D. Gottlieb(2006), “Urban Resurgence and the Consumer City,” *Urban Studies* 43(8), pp.1275~1299.
- Glaeser, E. L., J. Kolko, and A. Saiz(2001), “Consumer City,”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1), pp.27~50.
- McCann, P.(2013), *Modern Urban and Regional Economic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O'sullivan, A.(2015), 『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 박영사.